

G-Welfare Weekly Report

01

중앙정부 정책동향

1. 복지허브화 전국 1,152개 읍면동 추가 실시

01 주요 내용

- 복지부는 '16년부터 시작된 '읍면동 복지허브화' 사업을 올해 1,152개 읍면동에 확대 추진한다고 발표(2017. 2.14)
 -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은 '16년 1,094개에 이어 '17년 1,152개가 추가 확대되어 전체 읍면동 (3,502개)의 64%인 2,246개에서 추진될 예정
 - 복지부와 행자부는 '18년까지 전국의 모든 읍면동에 복지허브화를 추진하여 전 지역 주민이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
 - 복지허브화사업을 통해 읍면동은 과거에 복지사업 접수 창구 역할에서 '어려운 이웃 발굴, 필요서비스 지원, 사례관리'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임
 - '16년 주요 실적: 방문상담 1,067천 건, 서비스연계 912천 건, 지역주민 71천명 참여, 민간자원 약 223억 원 연계

〈표〉 '16~'17년 복지허브화 추진 읍면동 현황

구분	복지허브화 적용 읍면동 계(A)*	맞춤형복지팀 설치 읍면동(B)**	기본형(C)	권역형		
				계	중심동(D)	일반동(E)
2017년	1,152	798	618	534	180	354
2016년	1,094	738	576	518	162	356
누계	2,246	1,536	1,194	1,052	342	710

* A=C+D+E ** B=C+D (맞춤형 복지팀 설치 읍면동)
 * 2015년 12월 말 전국 읍면동사무소 수 : 3,502개소

- 또한,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신속하게 현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군구와 시도의 추천을 받아 성공 노하우를 공유·확산할 「17년 복지허브화 선도지역」 36개 읍면동을 선정
 - 선도지역은 복지부로부터 지역별 사업비 2천만 원을 지원받으며, 후발 지자체에서 내방하는 경우 노하우를 교육하고 운영 자료를 공유할 뿐 아니라, 인근 지역 지원도 적극 실시할 예정
 - 경기도의 '17년 선도 지역: 광명시(소하동), 양평군(용문면), 남양주시(진접읍), 파주시(파주읍)

02 경기도 시사점

- 경기도는 복지허브화 실시 읍면동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역량 강화 지원 예정
 -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지난 해에 이어 '복지허브화 추진단' 을 합동으로 구성하여 '17년 신규로 실시되는 147개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담당공무원 및 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대상의 교육 실시 예정
 - 또한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수행할 인력의 역량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 시군 상황에 맞춘 컨설팅을 실시(일반컨설팅, 집중컨설팅, 긴급컨설팅)할 계획
- 공공 전달체계 개편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 민간전달체계에 대한 변화 방향을 제시하고 공공과의 협력체계를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노력 필요

2. 보건·복지관련 법률 제·개정

01 주요내용

-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다수의 보건·복지관련 법안이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어, 법률안 별 주요내용과 기대효과를 살펴보고자 함

분야	주요 내용
보건	<p>보건의료기본법 [일부개정, 시행 2017.2.8.] ·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보건영향평가가 실시 : 5년마다 실시 후 결과를 공표하고,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</p> <p>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[일부개정, 시행 2017.8.9.] · 자살시도자 및 가족, 자살자의 가족 보호를 위한 국가의 정책 수립시행의무 추가 · 자살자의 자살원인 분석 등 심리부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</p> <p>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[제정, 시행 2017.8.9.] ·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지속가능한 지원 대책을 마련 · 영양급여, 영양생활수당, 장의비, 간병비 등 구제급여를 지급 ·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, 조사·연구 등을 위한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를 설치·운영</p>
장애인 복지	<p>장애인복지법 [일부개정, 시행 2017.8.9.] ·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: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설치, 장애인 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 근거 마련, 장애인에 대한 '강제노동행위' 금지 및 처벌 규정 마련, 금지산자·한정 처산자를 피성년후견인*으로 변경 · 장애인 가족 지원 :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수행 기관을 지정운영하는 근거 마련 · 장애인 관리체계 개선 : 장애인이 사망하는 경우 등에 있어 장애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심사를 받도록 함</p> <p>장애인연금법 [일부개정, 시행 2017.8.9.] · 장애인연금의 수급권 보장 및 사각지대 해소 : 수급희망이력관리제도 도입</p> <p>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[일부개정, 시행 2017.2.8.] · 범죄 억지력 확보 : 벌금형을 징역 1년당, 1천만 원으로 정비</p> <p>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[시행 2017.2.8.] 일부개정 · 우선구매비율에 미달한 공공기관에 대해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 시행</p>
주거	<p>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[제정, 시행 2018.2.9.] · 현행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서 규정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이관하여 사업 절차를 간소화/활성화 추구 : 건축규제완화, 임대주택건설 등의 특례규정과 정비지원 기구 지정, 임대관리업무 지원,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의 지원규정을 신설 ·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·시행</p>
기타	<p>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[일부개정, 시행 2017.8.9.] · 서비스 제공 관련 자료를 일정기간 보존하고 휴폐업 시 지방자치단체에 자료를 이관</p> <p>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[시행 2017.2.13.] · 제3국 체류 중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정착금 산정에 가산금 지급을 고려</p> <p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[일부개정, 시행 2017.3.1.] ·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과목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입·세출예산과목을 재편성 ·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 등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어린이집은 회계연도마다 일정 액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함</p>

* 민법이 2011. 3. 7. 금지산·한정 처산자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13. 7. 1.부터 시행

또한,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 등 사회적 약자의 소송능력 확대 및 고령자, 장애인 등의 의사소통을 돕는 진술보조인 제도를 신설한 개정 「민사소송법」이 2017. 2. 4. 시행

02 경기도 시사점

- 제·개정된 법에 따라 경기도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파악하여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, 관련 복지시설이나 사회서비스 기관에 변경된 법령 정보를 제공
 - 경기도는 상기 법에 근거한 관련 조례 내용을 검토하여 개정(안) 발의
 - 새로운 전달체계(예,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,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등) 설치를 요구한 경우 설치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남설(濫設)로 인한 비효율 최소화

02

사도/사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

1. 경기도의 인구이동 현황

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「2016년 국내인구이동통계」 자료를 바탕으로 경기도의 인구이동 현황과 주요원인을 분석 정리

- 경기도는 전국에서 인구규모가 가장 큰 지역으로, 전출입자 규모 또한 전국 최고
- 지난해 경기도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한 인구는 182.5만 명, 타 지역에서 경기도로 유입된 인구는 195.9만 명이며 순이동은 13.4만 명
 - 전출보다 전입인구가 많아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경기·세종·충남·세종·인천·충북·경남 등 총 7곳이며, 서울의 경우 지난해 인구이동을 통해 약 14만 명의 인구가 감소

〈표〉 전국 시도별 인구이동현황(2016)

지역	전입	전출	순이동	지역	전입	전출	순이동
전국	7,378,430	7,378,430	0	경기	1,958,593	1,824,976	133,617
서울	1,515,602	1,655,859	-140,257	강원	223,484	221,592	1,892
부산	459,015	480,407	-21,392	충북	202,679	197,668	5,011
대구	328,228	337,488	-9,260	충남	286,764	271,446	15,318
인천	441,646	435,869	5,777	전북	248,188	252,607	-4,419
광주	213,176	221,074	-7,898	전남	234,132	237,337	-3,205
대전	219,252	229,883	-10,631	경북	315,652	318,803	-3,151
울산	148,190	155,812	-7,622	경남	411,952	410,180	1,772
세종	65,052	35,236	29,816	제주	106,825	92,193	14,632

(단위: 명)

-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전출자보다 전입자 규모가 크지만, 연간 인구 순유입 규모는 지난 2002년 31.6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추세였다가 최근 다시 상승

〈그림〉 경기도 인구 순유입 현황



- 경기도 전입자의 56.4%는 서울에서 이동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'주택' 과 '직장'
 - 경기도 전출자는 주로 서울·인천·충남으로 이동하며, 그 사유는 주택, 직장, 가족 순
 - 전입자의 대부분은 서울의 전월세가 상승으로 교통여건이 좋으면서 주거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으로 이동한 것이며, 도내 사업체 수 증가*도 인구이동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
- 인구 1,300만을 돌파하는 등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대한 대책으로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과 교통여건 유지 및 개선을 통해 보다 살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노력 지속
 - 따복마을, 따복하우스 등 경기도만의 주거정책을 지속추진하고 적극 홍보하여 도민의 주거안정성을 더욱 강화

*2002년 54만 754개 → 2014년 81만260개

2. 재단 주요행사 안내

행사명	주요내용
경기복지거버넌스 워크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일 시 : 2017. 2. 27.(월) 14:00 • 장 소 : 화성YBM연수원 • 내 용 : 2017년 경기복지거버넌스 실무회의별 의제 및 추진방향 논의 • 참 석 : 경기복지거버넌스 실무위원 등 150명

03

FACT CHECK

지자체 복지사업 2배 증가, 생색내기 VS 복지체감도 향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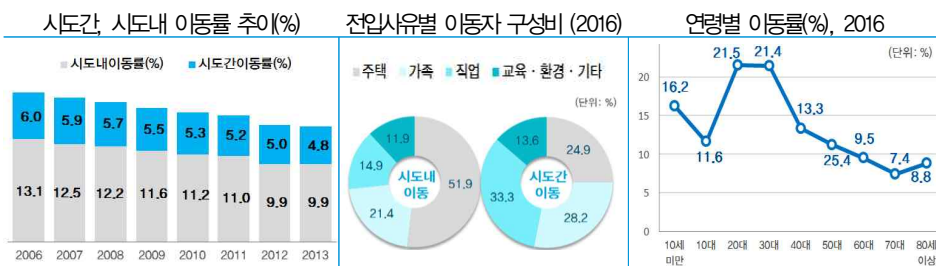
지자체 신규 복지사업 수는 2014년 26건에서 2016년 300건으로 2년 새 10배가 증가했으며, 생색내기가 많다(한국일보 2017. 2. 9, "지자체 복지사업 2년새 10배... 생색내기도 많다")

- 해당 기사는 지자체 사회보장제도가 양적으로 팽창하면서 '질' 보다는 '양'에 초점이 맞춰져 수준 미달이거나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는 사업들도 상당수라고 지적
 - 신규복지사업의 내용을 보면 절반 이상(54%)이 보훈(58건), 노인(51건) 및 장애인(53건) 분야이며, 그 외 여성 위생용품지원 14건, 출산용품 및 비용지원 26건, 난임부부시술지원 6건, 어린이 집 차액보육료 지원 8건 등으로 구성
- 그러나, 이러한 신규복지사업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저출산·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노력이며, 실제 지역특성과 주민의 필요에 맞는 이색 복지 사업 들도 상당수 존재
 - 경기도는 폐지 좁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방한복과 차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야광조끼, 야광봉, 안전장갑 등을 지원하여 호응도가 높으며,
 - 전남도의 치매노인용 위치추적기 지원 사업, 수원시의 아동 주치의사업 등도 긍정적 평가
- 전문가들은 중앙정부가 지자체 복지사업에 대해 '중복', '선심성'이라는 편견으로 시작조차 어렵게 하여 창의성을 사장시키고, 지자체 복지사업의 역량강화를 막고 있다고 지적
- 복지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규 사업 확대는 바람직하나 생색내거나 선심성이 되지 않도록 중앙정부는 원칙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되, 복지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

04

통계로 보는 복지

2016 인구이동 현황



-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이동자 수는 총 737.8만 명이며 시도 간 이동률은 4.8%, 시도 내 이동률은 9.6%로, 시도 내 이동이 전체 이동자의 66.7%(492.5만 명)을 차지
 - 전년대비 시도 내 이동은 5.4%(27.9만 명), 시도 간 이동은 3.8%(9.8만 명)이 감소
 - 도내 시군구별 순이동률에서 과천(-8.5%)의 순유출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순유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하남(23.3%)
- 시도 내 이동 사유는 주택(51.9%)이 많고, 시도 간 이동 사유는 직업(33.3%)의 비중이 높음
- 연령별 이동률을 살펴보면 20대(21.5%)와 30대(21.4%)의 이동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60대 이상부터는 이동률이 10% 미만